

코로나19 주춤...대중교통 이용 점차 증가

첫 확진자 발생 후 이용 급감...사람 많은 버스·지하철 기피 여전
광주시 방역소독 확대 등 불안 해소 총력...무분별한 공포 떨쳐야

■ #정모(40)씨는 18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이후 줄곧 버스 대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닌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다.

정씨는 “평소 일때문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하기가 번거로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지하철은 아예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을 고려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버스도 양상은 비슷하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4일(38만 8989명) 이후 5일(32만 5229명), 6일(30만 8597명), 7일(30만 2713명)까지 조금 줄었다가 8일(26만 1632명)과 9일(21만 4612명)에는 대폭 감소했다.

시내버스도 지난달 30일~2월 3일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이 35만 9597명이던 것을

에 비해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5~9일에는 하루평균 이용객이 28만 2556명에 불과했다. 10일(33만 7623명)부터는 이용객 수가 다시 늘었는데 확진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등 확산세가 잦아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9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했다가 10일부터는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매일 한 차례

실시하던 전체 전동차 방역소독을 월 2회로 늘리고 열차 내 승객들이 자주 만지는 손잡이·수직봉에 대한 분무 소독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대한 소독을 수시로 진행중이다. 역사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해 승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광주시도 1일 4회 이상 버스 가·종점에서 차량 내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버스 876대에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실 소독 꼼꼼히

12일 광주시 북구 문화초등학교에서 방역 관계자가 개학을 앞둔 교실을 소독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와 분청·직속기관 등 503 곳을 방역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방역 위해 차량 2부제 풀었더니...구청장 관용차에 ‘특혜’

코로나19 대응 기준 제각각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들이 제각각이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 권고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특혜’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환경부의 ‘차량 2부제 일시 해제 요청’에 따라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용차 2대를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으로 등록했다.

환경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방, 감시 방역업무

서구 방역 차량 2부제 제외
남구·북구는 그대로 유지
동구 고위층 차량 적용 논란
일회용품 사용 놓고 혼란도

와 같이 노출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서만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토록 한 것을 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방역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구청장·부구청장 관용차량에 적용한 것이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 적용을 예외토록 한 데는 동구가 유일하다.

서구의 경우 보건소 방역 담당부서원

차량 13대만 ‘차량2부제’ 적용을 제외했고 남구와 북구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기준을 제 멋대로 해석해 고위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아예 방역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제각각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일회용품 허용 기준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시가 환경부 지침을 반영, 지난 5일부터 5개 자치구 내 식당·카페 등 2만 2000여개에 대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한 조치도 현장에서는 혼

란만 키우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토록 했었다.

하지만 광주시 동구 충장동 카페 등에서는 매장 내에서 여전히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 사용을 강제하는가 하면, “일회용품 사용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매장 점원과 시민들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대상의 범위·기간과 관련,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6번 확진자 정보 1시간만에 확산 광주시장 비서관이 최초 유출했다

맘카페 등서 순식간에 퍼져
입다문 광주시 신뢰성 실추

이윽고 광주시장 비서관인 공무원이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이 유출한 공문은 몇 단계를 거치며 불과 1시간여만에 맘카페를 비롯,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특히 광주시는 사건 발생 당일, 시장 비서관의 최초 공문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여태껏 합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개인정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자칫 2차 피해 및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유포자나 발원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보냈다”며 “A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다음날인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공문을 전달받아 유포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만 불구속 기소 의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A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

직 비서관(5급)으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광산구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공문은 몇몇 사람들을 거치며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졌고 급속도로 퍼날라졌다. 광주시측은 이와 관련,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11시 22분 관계 기관 2곳에 방역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광산구에서 작성한 서류를 SNS를 통해 보냈다”며 “A씨는 확산 유포 경위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다음날인 5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공문을 전달받아 유포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만 불구속 기소 의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A씨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05보안부대에 어린이공원 조성 부적절”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서 지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잔혹한 고문인 자행된 505보안부대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면서 그 주변을 미래세대(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시청 18층 회의실에서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초청해 505보안부대 원형복원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505보안부대가 포함된 3만 8459㎡ 규모의 부지를 ‘미래세

대를 위한 역사 배움의 공원’으로 만드는 기존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라 ‘어린이 꿈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한 자문위원은 “505보안부대는 많은 시민이 고문을 당했던 역사의 현장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세대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올해 마스터플랜이 다시 수립될 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담배 한개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욕설 퍼붓고 주먹질



○...담배를 피던 남성에게 다가가 담배를 요구했으나 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32)씨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만 달라고 했으나, B씨가 가진 담배가 없다고 하자 “가난한 새끼”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담배를 주지 않자 화가난 A씨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00~4,800원 대출 3회 원금지원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지원 대출 (대우 100%)
- 저당업 소상인의 판매물품을 담보로 한 저당대출
- 3~4개월 65세 이상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금
- 65세 이상 조립형 중소형주택 임대료 지원금

평생 어부바 신협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신협 815해방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